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이동기(서울대 서양사학과 강사)

국문요약

서독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지향은 애초 나치의 파괴적 과거사에 대한 비판적 대결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아데나워의 서방통합정책의 효과로 발생했다. 서독의 정치경제적 성과와 정치문화의 서구화에 대한 자의식이 탈민족적 정체성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연방공화국 자의식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식의 이데올로기화한 체제정당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197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서독 탈민족주의자들은 현실 세력으로 등장한 ‘재-민족화’ 조류들과의 대결을 통해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전통적 민족사의 단절과 반성을 토대로 삼게 되었다. 이를테면 1980년대 중반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론에서 보듯 보편주의적 규범과 가치는 민족 또는 국가 특수적 경험에 대한 성찰적 정치문화와 비판적 자기정체성을 매개로 확보되는 것이었다.

한편 1970/80년대 서독의 ‘이-민족화’ 테제 주창자들은 동독의 국가적 인정과 체제 존중을 누구보다 더 앞서 그리고 철저히 주장했다. 상대의 인정을 통한 자기존재의 인정의 과정을 통해 서독의 탈민족론은 서독의 고유한 정치적 정체성의 존재를 확인해나갔다. 동방정책을 통한 동서독 간 교류협력은 민족 간 유대를 만들어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질성을 확인하며 자기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양 체제 내에서 발현되는 양상은 균질적이지도 균형적이지도 않았다. 통일 전과 통일과정에서 서독 탈민족론자들이 겪은 비극의 핵심 원인은 민족정체성을 넘어선 그 동서독 개별 정체성 간의 비균질성과 불균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1989/90년 ‘전환’기에 그들은 동독의 민주혁명과 민족적 전망의 역동적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무관심했기에 의미 있는 대안적 정치 전망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주제어: 탈민족 담론, 이-민족화 테제, 헌법애국주의, 동방정책, 서방통합, 독일통일

I. 머리말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독일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다.”¹⁾ 독일통일 15주년이 되는 1886년에 나온 니체의 이 언급은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19세기 유럽의 국민국가 건설과 민족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자국의 “지체된 민족(Die verspätete Nation)”²⁾(Helmuth Plessner) 형성과 혼란스런 독일 정체성 및 문화를 목도하며 나온 회고적 성격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것은 오히려 20세기 후반 분단 독일에서 전개된 민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슬한 견해들의 등장을 예언하는 말이었다. 독일사의 ‘특수한 길(Sonderweg)’을 주장하는 논의야 점차 잦아들고 있지만³⁾ 민족 정체성의 존재 유무와 민족공동체의 향방을 둘러싸고 독일인들이 전개한 무수한 지적 사유와 정치적 상상은 그 자체로 매우 ‘특수’하다. 특히 20세기 후반 냉전과 분단 시기 독일은 유례없는 민족 담론의 백화제방(百花齊放)을 경험했다. 독일적 정체성을 자문하는 문화적 전통에 더해 나치즘의 파국 및 분단 현실은 독일인들로 하여금 민족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고 민족의 경로를 모색하는 여러 사유 실험들을 자극했다.⁴⁾

1) 프리드리히 니체, 김정현 옮김, 『니체 전집 14, 선악의 저편』 (서울: 책세상, 2002), p. 242(인용문은 저자의 수정 번역임).

2) Helmut Plessner, *Die verspätete Nation* (Stuttgart: Kohlhammer, 1959).

3) 독일사의 ‘특수한 길’과 관련해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논쟁의 결산에 대해서는 “Interview with David Blackbourn and Geoff Eley on 20th anniversary of *The Peculiarities of German History*: Forum”, *German History*, vol. 22 (2004), pp. 229~245를 참조하라.

4) 분단 시기 독일의 민족 문제 토론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Florian Roth, *Die Idee der Nation im politischen Diskurs, Die Bundesrepublik zwischen neuer Ostpolitik und Wiedervereinigung* (1969~1990) (Baden-Baden: Nomos,

그런데 분단시기 독일에서는 민족적 공속감과 기대지평을 공동의 사유공간으로 확장하는 논의 못지않게 독일민족의 ‘정상화’가 탈민족(postnational) 내지 초민족(supranational) 정체성과 정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한 흐름도 작지 않았다.⁵⁾ 물론 분단 독일에서 민족의 존재나 연속 그리고 민족정체성의 존속 등을 부정하면서 국민국가로의 재통일의 가능성과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탈민족’ 담론과 그 정치는 ‘초민족’ 지향의 다양한 정치적 구상 및 그 현실적 발전들과는 기본적으로 구분된다. 초민족적 발전과 그 미래구상은 국민국가 중심의 정치 틀의 초월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민족 논의와도 일부 접점을 갖는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국가의 권능을 더 상위의 국제적 기구나 조직에 이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에 그 자체로는 탈민족적 논의 흐름들과 직접 조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⁶⁾ 그렇기에 이 글은 민족 또는 국민국

1995) ; Bettina Westle, *Kollektive Identität im vereinten Deutschland, Nation und Demokratie der Deutschen* (Opladen: Leske + Budrich, 1999), pp. 40~86. 한편 서독 민족중립주의자들의 다양한 민족 담론에 대해서는 Alexander Gallus, *Die Neutralisten: Verfechter eines vereinten Deutschland zwischen Ost und West, 1945~1990* (Düsseldorf: Droste, 2001). 서독에서 민족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Jürgen C. Heß, “Die Bundesrepublik auf dem Weg zur Nation” *Neue Politische Literatur*, 3/Jg. 26 (1981), pp. 292~324.

- 5) 이에 대한 압축적 정리로는 Heinrich August Winkler, “Nationalismus, Nationalstaat und nationale Frage in Deutschland seit 1945”, in H. A. Winkler and Hartmut Kaelble eds., *Nationalismus - Nationalitäten - Supranationalität* (Stuttgart: Klett-Cotta, 1993), pp. 12~33을 참조하라. 한편 분단 시기 서독의 탈민족 담론 전반에 대해서는 Jens Hacker, *Deutsche Irrtümer, Schönfärber und Helfershelfer der SED-Diktatur im Westen* (Berlin: Ullstein, 1992)을 참조하라.
- 6) ‘초민족성(Supranationalität)’의 개념적 이해에 대해서는 Guido Thieme, “Supranationalität als Novum in der Geschichte der internationalen Politik der fünfziger Jahre”,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History*, vol. 4 (1998), pp. 5~21을 참조하라.

가의 경계를 넘어선 초민족적 국제적 질서의 구상과 그 발전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다만 분단 독일에서 하나의 독일민족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국민국가로의 재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부인하는 탈민족적 논의의 흐름들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그 독특한 성격을 해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주로 서독의 탈민족론에 집중하는데 그 이유는 지면상 제약 외에도 1970~1980년대 동독 지배자들의 '이(二)민족론'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동독사 연구에서 이데올로기 비판의 관점에서 술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분단 서독에서 전개된 탈민족 담론과 정치의 역사적 발전 양상과 특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독의 탈민족 지향의 흐름들을 규정할 몇 가지 배경 요인들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본은 바이마르가 아니다.”⁷⁾ 일차대전 직후와는 달리 이차대전 후 독일정치와 사회에서는 민족주의가 더 이상 정치적 동원이나 흡인력의 근거가 될 수 없었다. 홀로코스트로 인한 독일 민족주의의 정당성의 상실은 탈민족화(Denationalisierung)의 주요 기반이었다.⁸⁾ 둘째, ‘제4제국’의 출현에 대한 유럽 주변국들의 두려움과 우려 또한 전후 시기 내내 독일인들의 새로운 민족정체성 탐색을 강하게 압박했다.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 모리악(François Mauriac)의 언명, “우리는 독일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것이 돌인 것이 기쁘다”는 말

7) Fritz René Allemann, Bonn ist nicht Weimar (Köln: Kiepenheuer & Witsch, 1956)

8) 독일 민족주의 역사에 대한 가장 탁월한 분석가인 하인리히 아우구스트 빙클러는 전후 독일에서 민족주의가 쇠약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나치즘의 교훈적 효과, 둘째, 경제성장과 대량소비시대의 등장으로 민족주의의 흡인력 상실, 셋째, 전후 서독에서는 민족주의가 더 이상 사회적 하강에 대한 두려움의 마취제가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두려움을 부르는 것이 오히려 공산주의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감정이었다는 사실이다. 민족주의에 기초한 독자 노선적 코립이 아니라 초민족적 서방통합이야말로 안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H. A. Winkler, “Nationalismus, Nationalstaat und nationale Frage in Deutschland”, p. 16.

이 대다수 비독일 유럽인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이라면 1989~1990년 독일 통일 국면에서 영국의 대처 수상이 독일 통일에 반대하며 수시로 꺼내들은 낡은 유럽지도는 그 정서를 적극적으로 국제 정치적 실천에 옮긴 전형적 예였다. 셋째, 장기적 전망으로서의 유럽통합 및 유럽공동체라는 초민족적 정치현실 또한 독일의 탈민족 담론을 규정했다. ‘독일분단이 곧 유럽분단’이라는 사실은 독일인들에게 독일문제에 대해 ‘독일적 해결’이 아니라 ‘유럽적 해결’의 전망을 열어주는 것이었다.⁹⁾ ‘독일적 독일’이 아니라 ‘유럽적 독일’의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분단 독일에서 전통적 민족주의의 제한과 통제 및 민족적인 것에 대한 견제와 의심이 불가피했다. 그 외에도 서방통합과 동방정책의 효과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이미 탈민족론의 배경적 요소라기보다는 그 형성 과정의 핵심 계기이기에 따로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겠다.

II. 서독 탈민족론들의 발전 양상과 특징

1. 탈민족론의 등장: 서방통합의 논리적 귀결

서독 탈민족론의 등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애초 그것이 전쟁과 학살이라는 민족사적 과거에 대한 반성의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949년 분단 이후 1970년대 중후반까지는 서독 여론 사회에서 누구도 분명하게 홀로코스트의 경험으로부터 탈민족 지향을 도출해내지 않았다. 독일분단은 냉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나치즘의 파국적 발전의 연

⁹⁾ 물론 독일분단과 유럽분단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극복들의 상호작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Timothy Garton Ash, *In Europe's Name, Germany and the Divided Continent* (New York: Vintage, 1993), pp. 1~27을 참조하라.

장으로 이해되었다. 그런 한 독일민족의 재통일은 오히려 나치 과거를 민족사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의 일부로 당연하게 전제할 수 있었다. 분단 초기 국면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민족 간 화해와 통일,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주장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나치즘의 핍박을 직접 받고 전후 그것의 극복을 주창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전후 누구보다도 민족적이었던 서독 사민당 당수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를 비롯해 민족중립주의를 주창한 다양한 조류의 민족적 정치가들은 다시는 독일 땅에서 전쟁과 학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했다.¹⁰⁾ 물론 1950년대 민족 지향의 정치와 사상적 조류에 극단적 민족주의나 극우 정치세력이 함께 결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요체는 적어도 1950~1960년대까지는 나치즘의 파국에 대해 역사 비판적 태도를 취하더라도 그것이 곧장 민족적 전망에 대한 회의적 입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1960년대 서독 정치무대를 뜨겁게 달군 학생운동과 재야운동(APO-Bewegung)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흔히 이해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기 내내 '신좌파(Neue Linke)'로서 자기정체성을 찾아 나갈 때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¹¹⁾

이에 반해 탈민족 담론의 초기 양상을 규정지은 것은 서독 초대 수상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의 서방통합정책이었다. 동서냉전 블록 형성에 조용하며 추진된 아데나워 정부(1949~1963)의 서방통합정책과 강자우위 정책(Politik der Stärke)은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독일통일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였고 실제로는 민족 통합적 정체성만 약화시켰다.

¹⁰⁾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A. Gallus, *Die Neutralisten*, pp. 57~295.

¹¹⁾ 서독 68운동과 68세대에서 나타난 민족문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동기, “서독 68운동과 독일정책: 민족좌파로서의 신좌파?”, 『독일연구, 역사, 사회, 문화』, vol. 17 (2009. 6), pp. 65~107.

서방통합정책은 사실 그 자체로 독일 근대외교사의 ‘혁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민족적 전통(‘특수한 길’)과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그것은 극단적 민족주의의 극복 뿐 아니라 정치문화 및 일상문화에서 탈민족화를 초래했다. 이 혁명과 단절은 경제성장에 기초한 서독 사회의 물질적 복리와 결합하여 서독 사회에 새로운 지향의 근거를 마련했다.¹²⁾

서독 사회의 이 새로운 발전에 조용해 철학자 칼 야스퍼스(Karl Jaspers)는 1960년 라디오 방송 인터뷰 및 자유주의적 주간지 『디자인트(Die Zeit)』를 통해 “독일 통일 요구가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견해를 처음으로 밝혔다.¹³⁾ 자유에 대한 민중의 기본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한 국민국가적 차원에 대한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야스퍼스는 보았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자유 달성과 주권 확보를 예로 들어 “앞으로 통일 없이도 자유가 확보될 수 있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은 다 이룬 셈이다”고 강조하며 동독과의 통일보다는 동독에서의 자유 확대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즉 통일을 유예 내지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동독이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었다. 그런데 야스퍼스는 사실 아데나워가 추구한 독일정책의 기본 원리, 즉 ‘통일이전에 자유’ 내지 ‘자유를 통한 통일’의 기본 관점과 구상을 더 밀어붙여 “자유는 절대적인 요구이고 통일은 상대적인 것이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보기에 통일과 자유는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서로 분리 가능한 목표였다.¹⁴⁾ 야스퍼스는 국민국가로서의 독일이라는 정치적 가정과 단호히 결별하고 연방공화국(서독)을 궁극적인 정치적 사회

¹²⁾ H. A. Winkler, “Nationalismus, Nationalstaat und nationale Frage in Deutschland”, p. 16.

¹³⁾ Karl Jaspers,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Über Aufgaben deutscher Politik* (München: Piper, 1960), p. 110.

¹⁴⁾ Jens Hacker, *Deutsche Irrtümer*, pp. 282~283을 참조하라.

화 형식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동서독 간 하나의 국민 국가로의 재통일을 포기하고 현상 유지에 기반해 동독 주민의 자유 확대 내지 삶의 개선을 정치적 의제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제기는 곧 서독의 체제 내 모든 정당들과 여론사회로부터 십자포화를 받았다. 아직은 다만 골로 만(Golo Mann)같은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유사한 주장을 전개했을 뿐이다.¹⁵⁾

2. 1970년대 서독 정체성의 확인과 '이-민족화' 테제

서방통합과는 달리 1969년 이후 빌리 브란트 주도의 사민당/자민당 연정의 동방정책은 더 직접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자기인정 및 분리된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했다. 주지하듯이 동방정책은 무엇보다 1945년의 전후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추진되었다. 그런 한 동독을 국가로서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그 출발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여론사회에서 동방정책 구상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지하며 동방정치가들을 동반했던 상당수 자유주의적 좌파 지식인들은 동방정책의 발전 속에서 동독의 인정을 통한 연방공화국의 자기인정이라는 결론에 함께 도달했다. 이를테면 1972년 비판적 자유주의 계열의 주간지 『디 자이트(Die Zeit)』의 편집자 테오 쉰머(Theo Sommer)는 동방조약들의 승인 결과가 지닌 함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전후 유럽에 생겨난 현실들의 인정은 동시에 연방공화국의 자기인정을 의미한다. 연방공화국은 마침내 자신의 존재와 있는 그대로 화해하고 이제부터 자신의 국가이성(Staatsräson)에 대해 솔직해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¹⁶⁾

¹⁵⁾ Golo Mann, *Deutsche Geschichte des 19. und 20. Jahrhunderts* (Frankfurt am Main: Fischer Verlag, 1966), p. 1048.

¹⁶⁾ F. Roth, *Die Idee der Nation im politischen Diskurs*, p. 112에서 재인용.

이와 함께 분단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여전히 하나의 민족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들이 강화되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많은 자유주의적 또는 시민주의적 경향의 지식인들은 ‘독일 민족’의 지속적 존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를테면 1969년 이래 서독 사민당 계열의 대표적 지식인인 쿠르트 존타이머(Kurt Sontheimer)는 야스퍼스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연계하여 분단 독일에서 하나의 민족정체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¹⁷⁾ 비록 앞선 시기의 민족 통일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야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지만 “하나의 민족을 일상적으로 갱신하는 국가 내에서의 공동생활이라는 추진력이 부재하다”는 것이 그의 논거였다. 정치학자 존타이머는 분단이라는 조건하에서 독일인들은 두 개의 국가주민(Staatsvolk)으로 갈려 각기 서로 다른 정치 질서와 사회 체제에 속하게 된 현실을 부각시키면서 동서독 간에는 정치나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했다. 공동의 역사나 언어, 문화전통 등에 의거한 정체성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한편 1970년대 초 서독인들이 하나의 단일한 독일 민족 정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된 서독 정체성’을 강하게 내재화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이는 무엇보다 루츠 니트함머(Lutz Niethammer)와 게르하르트 슈바이글러(Gerhard Schweigler)였다.¹⁸⁾ 먼저 서독 사회사 전통의 좌파 역

17) 이하 내용은 Kurt Sontheimer, “Nation und Nationalismus in der Bundesrepublik” (1969), in Hans Steffen ed., *Gesellschaft in der Bundesrepublik*, 2. Tei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1), pp. 130~152 ; *Deutschland zwischen Demokratie und Antidemokratie. Studien zum politischen Bewußtsein der Deutschen* (München: Nymphenburger Verlagshandlung, 1971)을 참조하라.

18) Lutz Niethammer, “Traditionen und Perspektiven der Nationalstaatlichkeit für die BRD(1971)”, in *Deutschland danach. Postfaschistische Gesellschaft und nationales*

사가 니트함머는 실증적 연구에 기초해 서독인들이 “서독 국가와 준(準) – 민족적 동일화”를 경험하고 있음에 의거해¹⁹⁾ 서독 사회를 일종의 국가 민족(Staatsnation)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서독(연방공화국)을 “숨겨진 민족(Krypto-Nation)” 내지 “준(準) – 민족으로 다져진 국가사회”라고 규정했다. 슈바이글러는 한발 더 나아가 서독 뿐 아니라 동독에서도 사실상 새로운 독자적 민족의식이 생겨나고 있음을 다양한 주제별 경험적 설문 조사를 통해 제출했다.²⁰⁾ 이어 자유주의 좌파 계열의 학자들 또는 급진적 – 대안적 정치입장을 지닌 지식인들은 1970년대 내내 독일에서의 ‘이(二) – 민족화(Bi-Nationalisierung)’ 경향을 확인하고 선전하는데 열심이 었다. 한스 몸젠(Hans Mommsen)과 볼프강 몸젠(Wolfgang Mommsen) 형제, 발데마르 베손(Waldemar Besson), 마리오 라이너 램시우스(Mario Rainer Lepsius), 정치학자 에버하르트 슐츠(Eberhard Schluz), 에른스트 – 오토 첼필(Ernst-Otto Czempiel) 등이 대표적 인물들이었다.²¹⁾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식인들의 탈민족적 관찰과 주장들이 동서독

Gedächtnis (Bonn: Dietz, 1999), pp. 74-169 ; Gerhard Schweigler, *Nationalbewusstsein in der BRD und DDR*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3).

- 19) 이를테면 1971년의 조사에 따르면 서독 정치가들이 “우리 민족의 이익”이라고 말할 때 서독 주민들의 41%는 단지 서독을 떠올릴 뿐이고 38%가 동독과 서독 모두와 연관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Lutz Niethammer, “Traditionen und Perspektiven der Nationalstaatlichkeit für die BRD(1971)”, p. 164. 서독의 독자적 국민 정체성의 발전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와 경험적 보고는 Gerhard Schweigler, *Nationalbewusstsein in der BRD und DDR*, pp. 106-188도 참조하라.
- 20) 슈바이글러의 분석에 따르면 1969년 동독 주민의 43%는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을 지지하고 단지 25%만이 반대한다고 했다. 또 1960년대 중반 동독 주민들의 동독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증대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Gerhard Schweigler, *Nationalbewusstsein in der BRD und DDR*, pp. 95-105를 참조하라. 그러나 1961년 이후의 동독 주민들의 여론 조사는 간접적인 것이어서 신뢰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 21) 그들의 다양한 탈민족적 관찰과 주장에 대해서는 F. Roth, *Die Idee der Nation im politischen Diskurs*, pp. 111-145 ; Jens Hacker, *Deutsche Irrtümer*를 참조하라.

간의 접촉과 교류가 본격화된 때 나왔다는 것이다. 동독에서 서독과 유사한 일국적 정체성 내지 동독-국민 형성이 실제 얼마나 진행 중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독의 장래에 대해 그들은 유사한 정치적 결론을 내렸다. 이를테면 존타이머는 “통일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포기하고 동독 사람들의 상황 개선에만 매달릴” 것과 서독인들의 구체적인 정치적 책임은 단지 서독에만 해당되며 서독인들이 서독에서 그것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아마 동독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저 너머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²²⁾ 존타이머는 동독의 전체주의적 지배성격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동독이 미래에도 여전히 사회주의국가로 유지할 것이며 동독주민들의 다수가 그 체제에 순응해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의식을 발전해갈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같은 탈민족적 관찰과 진단은 동서독 간 대화와 협력정치的基本구상과 일치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전혀 조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1970년대 동독 국가 지도부는 ‘현실적 서방정책’을 내세우며 동서독간 국가통일을 완전히 포기했을 뿐 만 아니라 ‘이(二)-민족’ 테제를 공식적 입장으로 선전했다. 한편 1970년대 빌리 브란트와 헬무트 슈미트 사민당 총리들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독일 민족의 지속적 존재를 부정한 적도 없고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서독 정부의 ‘실용적 동방정책’은 통일논의를 전면 유보할 것을 전제했다. 결국 동서독 간 교류가 과연 민족지향의 동방정치가들이 기대했던 대로 민족 간 결속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동방정책의 지식인 지지자들이 진단한대로 동독과 서독의 ‘이(二)-민족화’ 경향을 새로운 독일정치의 조건으로 전제하고 수용

²²⁾ K. Sontheimer, “Reden über Deutschland” *Reden über das eigene Land ; Deutschland* 6. (München, 1989), p. 45 ; “Volk und Nation im Nachkriegsdeutschland” *Die Mitarbeit, Zeitschrift zur Gesellschafts- und Kulturpolitik*, Jg. 18 (1969), p. 104.

해야 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이 '이-민족화'의 대변자들은 그 문제에 더 천착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을 만났다. 그것은 1970년 후반부터 서독 정치와 여론사회 일각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재-민족화' 경향이었다.

3. 1979~1983년 탈민족론의 강화: '재-민족화' 경향과의 대결

1978~1979년부터 1980년 초반까지 서독 정치와 여론 사회는 두 가지 주요한 계기를 통해 민족 문제에 대한 새롭고 격렬한 토론을 경험했다. 나토(NATO) 재무장 토론과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비롯된 '제2차 냉전'의 개시와 연방공화국 건국 30주년을 맞이한 서독의 자기정체성 질문이 그것이다. 이 시기 많은 수의 서독 지식인과 정치가들은 신문과 학술 잡지 그리고 저작을 통해서 민족정체성 존재 유무, 동서독 간 관계와 독일 통일 전망, 유럽에서의 평화 구축 문제의 연관관계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논쟁적으로 제출했다.

먼저 전통적인 권력정치 지향의 민족주의자들²³⁾에 더해 새롭게 등장한 민족혁명적 신우파(Neue Rechte) 그룹들²⁴⁾ 및 학생운동과 평화운동에

23) 가장 대표적인 것은 Hans-Dietrich Sander, *Der nationale Imperative, Ideengänge und Werkstücke zur Wiederherstellung Deutschlands* (Krefeld: Sinus Verlag, 1980) ; Caspar von Schrenck-Notzing and Armin Mohler eds., *Deutsche Identität* (Krefeld: Sinus Verlag, 1982).

24) 신우파(독일판 뉴라이트) 그룹들의 입장은 먼저 볼프강 슈트라우쓰(Wolfgang Strauß)와 헤닝 아이히베르크(Henning Eichberg) 및 잡지 '비어 젤프스트(wir selbst: 우리 스스로)'가 대변했다. 이에 대해서는 Alexander Gallus, *Die Neutralisten*, pp. 397~409 ; Henning Eichberg, *Nationale Identität, Entfremdung und nationale Frage in der Industriegesellschaft* (München: Herbig Verlag, 1978) ; "Balkanisierung für Jedermann? - Nation, Identität-Entfremdung in der Industriegesellschaft", *Befreiung*, Nr. 19/20 (1980), pp. 46~69 ; *Abkoppelung, Nachdenken über die neue deutsche Frage* (Koblenz: Bublies Siegfried, 1987) ; Eckhard Jesse, "Zeitschriftenporträt:

서 성장한 한 흐름인 민족좌파(Nationale Linke)²⁵들은 독일의 분단문제가 국제적 냉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원인이라고 보며 독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유럽에서 평화가 달성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동방정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통일논의를 원천 배제한 것을 비판했다. 국민국가로의 재통일을 통한 독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주장이었다. 분단 독일의 양쪽에는 아직 강력한 민족 감정과 공속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일깨우는 것이 정치와 지식인들의 역할이라고 보았기에 그들 사이의 근본적인 정치적 견해 차이나 인적 문화적 이질감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민족지향적 공동의 대오를 결성해 정치무대와 여론사회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²⁶

이 “기이한 국외자들”(볼프강 벤오어)의 “민족운동”에 대항해 탈민족지향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유럽의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는 것은 독일통일이 아니라 유럽분열의 극복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공동의 유럽

wir selbst”, *Jahrbuch Extremismus & Demokratie*, Bd. 11 (1999), pp. 239~253. 한편 그들과 유사한 경향의 가치보수적 신우파 지식인들에 대해서는 Wolfgang Venohr, ed., *Die deutsche Einheit kommt bestimmt* (Bergisch-Gladbach: Luebbe Verlagsgruppe, 1982) ; *Ohne Deutschland geht es nicht, Acht Essays von sieben Autoren zur Lage der deutschen Nation* (Krefeld: Sinus Verlag, 1985)을 참조하라.

²⁵ 서베를린과 쾰른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들 민족지향의 좌파들에 대해서는 이동기, “서독 68운동과 독일정책: 민족좌파로서의 신좌파?”, pp. 97~104.

²⁶ 특히 1984~1985년 민족혁명적 신우파와 민족좌파들은 수차례나 공동으로 선언문 내지 저작집을 발간하며 정치토론회 등을 통해 연대활동을 벌였다. “Den Frieden retten - Deutschland vereinen”, Eckhard Jesse, ed., *Renaissance der deutschen Frage* (Stuttgart: Klett-Cotta, 1987), pp. 47~48 ; “Anstoß für eine deutsch-deutsche Alternative, Materialbrief Deutsche Probleme - Probleme mit Deutschland”, 1. Jg., Nr. 2 (November 1984), Archiv Grüne Gedächtnis, BII 1-5146 ; Herbert Ammon and Theodor Schweisfurth, *Friedensvertrag - Deutsche Konföderation - Europäisches Sicherheitssystem, Denkschrift zur Verwirklichung einer 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mit 50 Seiten Dokumenten* (Stamberg, 1985).

안보체제”(에곤 바르) 확립을 통한 “유럽의 유럽화”(페터 벤더)에 의거해 유럽적 해결만이 평화의 유일한 과정이라고 확신했다.²⁷⁾ 독일문제는 단지 이 유럽적 해결 속에서 극복될 것이며 민족으로의 회귀 또는 전통적 국민국가의 재창출은 분단 독일에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주로 사민당과 녹색당 소속의 정치가들 그리고 자유주의적 좌파 지식인들은 유럽 평화가 독일분단의 지속과 동서양 진영의 균형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았기에 소련과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독일통일 문제가 국제적 토론의 쟁점으로 부각되면 동서독 관계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 양독 국가의 실제적 이익의 증진을 교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⁸⁾

게다가 군사블록 간 대결이라는 국제정치적 현실 외에 독일의 ‘재민족화’(아르노 클뢰네)²⁹⁾가 불가능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이미 서독에서 발전한 실제 사람들의 삶의 현실과도 동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당시 독일문제와 관련한 토론에 참여했던 좌파적 지식인들과 학자들은 강제적인 전(全)독일(gesamtdeutsch) 의식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독일 민족주의의 재등장과 이데올로기화된 민족의식의 신드롬을 불러일

²⁷⁾ Günter Gaus, *Wo Deutschland liegt. Eine Ortsbestimmung* (Hamburg: Hoffmann u. Campe Verlag, 1983) ; Peter Bender, *Das Ende des ideologischen Zeitalters. Die Europäisierung Europas* (Berlin: Severin und Siedler, 1981) ; Egon Bahr, “Gemeinsame Sicherheit. Gedenken zur Entschärfung der nuklearen Konfrontation in Europa” *Europa-Archiv*, Folge 14 (1982), pp. 421~430 ; Andreas Vogtmeier, *Egon Bahr und die deutsche Frage. Zur Entwicklung der sozialdemokratischen Ost-und Deutschlandpolitik vom Kriegsende bis zur Vereinigung* (Bonn: Dietz, 1996), pp. 222~264, 333~357.

²⁸⁾ 이를테면 Egon Bahr, *Was wird aus den Deutschen? Fragen und Antworten* (Reinbek: Rowohlt Verlag, 1982), p. 23 ; Peter Bender, *Das Ende des ideologischen Zeitalters*, p. 228을 참조하라.

²⁹⁾ Arno Klönne, *Zurück zur Nation? Kontroversen zu deutschen Fragen* (Köln: Diederichs Eugen, 1984), pp. 86~102.

으킬 것이라고 심각히 우려했다.³⁰⁾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 서독의 비판적 역사가들과 지식인들은 나치의 민족사적 파국을 여전히 부정하며 연합국의 독일 ‘점령’에 대항할 민족 혁명을 주창하고 있던 극우세력들의 재결집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를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의 범죄로 단죄하되 이를 다시 독일민족의 오랜 독립과 통일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서의 일탈쯤으로 간주하는 변호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신우파 및 민족보수주의자들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도 맞서야 했다.³¹⁾ 이를테면 대표적 탈민족적 비판역사가 한스 몸젠(Hans Mommsen)은 민족사적 연속성과 전독일적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이 새로운 경향이 서독 주민들, 특히 청년 세대들의 비판적 역사상과 조응하지 못한 낡은 집착임을 강조하

30) 이에 대해서는 Lutz Niethammer, “Bundesrepublik und Nation” *Politik und Kultur*, vol. 4 (1977), pp. 26~36 ; Arnon Klönne, “Vorsicht, nationale Sozialisten, November 1978 (Auszug), nach: das da-Avanti Nr. 11, November 1978”, Peter Brandt and Herbert Ammon eds., *Die Linke und die nationale Frage. Dokumente zur deutschen Einheit seit 1945* (Reinbek: Rowohlt Verlag, 1981), pp. 352~353 ; Hans Mommsen, “Auf der Suche nach der Nation.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Nationalbewusstseins”, *Evangelische Kommentare*, Nr. 10/Jg. 12 (Oktober 1979), pp. 565~567 ; “Nationalismus und transnationale Integrationsprozesse in der Gegenwar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9 (1980), pp. 3~14 ; Jürgen Kocka, “Nation und Gesellschaft. Historische Überlegungen zur deutschen Fragen” *Politik und Kultur*, vol. 1 (1981), pp. 3~25. 특히 비판적 역사가들이 적극적으로 이 ‘정체성’ 논쟁에 참여했는데 그 이유는 애초 논쟁이 1978년 11월 말 각주 문화부장관의 회의에서 역사 교과서에서 독일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결의한데 대한 비판으로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3. November 1978”,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6 (1979), pp. 343~356 ; Karl-Heinz Janßen, “Chauvinismus in der Schule. 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 Schablonen aus Bonn”, *Die Zeit*, vol. 8, no. 12 (1978), p. 5.

31) 특히 Hellmut Diwald, *Geschichte der Deutschen* (Frankfurt am Main: Propyläen Verlag, 1978) ; Wolfgang Venohr, “Die Herrschenden und der Neue Patriotismus”, *Die Neue Gesellschaft*, 29. Jg., (August 1982), pp. 725~727을 참조하라.

였고 서독과 동독 모두에서 이미 비스마르크식의 국민국가적 전통이 종결되었다고 지적했다.³²⁾ 더불어 분단 독일에서 언어와 공통의 문화적 전통에 기초한 민족적 연대와 민족의식의 강조란 인위적인 또는 강제적인 역사상의 빈약한 토대에 불과해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이-민족화' 경향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독일 내 지역적-지방적 정체성의 강화 및 횡단국가적(transnational) 통합과정이라는 유럽적 현실의 발전에도 단지 시대착오적 교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렇듯 1979년대 후반부터 서독의 탈민족론의 대변자들은 새롭게 서독 정치 무대에 등장한 '재-민족화' 경향에 맞서 적극적으로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위적 민족정체성의 극복이라는 비판적 역사의식의 문제를 자신들의 탈민족론을 채우는 내용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서독정체성의 현재적 확인이 비극적 민족사의 역사적 극복이라는 민주적 과제 및 평화를 위한 미래의 초민족적 유럽구상과 접목됨으로써 서독 탈민족론은 그 고유의 색깔을 만들어 나갔다. 그리하여 1980년 초반 서독의 탈민족론은 좌파-자유주의 여론 사회에서 공동의 정치적 지향과 사유 운동의 근거로 발전할 수 있었다.

Ⅲ. 1980년대 헌법애국주의 논쟁

1. 돌프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

“나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지요!” 1969년 사민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구스타프 하이네만

32) Hans Mommsen, “Nationalismus und transnationale Integrationsprozesse in der Gegenwart”, pp. 8-9.

(Gustav Heinemann)은 “연방공화국을 사랑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다. 이후에도 서독 여론사회에서는 ‘간단치 않은 조국(Schwieriges Vaterland)’에 대한 불편함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표현되었다. 그러나 1979년 서독 건국 30주년을 전후해 서독의 자기인정과 서독 주민의 집단적 자기정체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것과 민족의식 및 초민족 지향과 어떤 관련을 맺을지가 중요한 지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분단 독일에서 국가정체성과 (탈/초)민족 의식의 관계는 1980년대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 논쟁에서 그 특수한 양상을 드러냈다.

서독에서 헌법애국주의를 처음 설파한 정치학자 돌프 슈테른베르거(Dolf Sternberger)가는 오랫동안 칼 야스퍼스와 함께 친교를 나누고 같이 지적 작업을 수행했다(학술 잡지 ‘디반들룽 Die Wandlung: 변화’의 공동편집자)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그는 이미 1947년, 그리고 다시 1950년대 후반부터 헌법국가에 대한 애국주의적 감정에 대해 논했고 “친국가적 태도(Staatsfreundschaf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³³⁾ 1979년 서독 건국 30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글에서 슈테른베르거는 이제 더 확연히 서독의 국가발전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갖고 ‘헌법애국주의’ 개념을 본격적

33) 이미 1947년 슈테른베르거는 조국에 대한 공화주의적 이해와 헌법애국주의에 대한 개념적 구상을 선보였다. “조국이란 개념은 정치헌법에서 비로소 구현된다. 조국은, 레오폴트 랑케가 일종의 보수적인 신비주의 방식으로 민족체로 이해했던 것, 또는 다르게 말한다면 이성적 능력은 배제된 ‘어둡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궁’이 아니다. 조국은 밝은 빛 아래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조국의 실제 헌법에 활발하고 자유롭게 성숙하게 참여할 때에만 조국을 사랑할 수 있다.” Dolf Sternberger, “Begriff des Vaterlandes”(1947), in Dolf Sternberger, *Ich wünschte ein Bürger zu sein’ Neun Versuche über den Staa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67), p. 37 ; “Das Vaterland” (1959), in *Verfassungspatriotismus. Schriften X* (Frankfurt am Main: Insel, 1990), pp. 11~12 ; *Staatsfreundschaft. Schriften IV* (Frankfurt am Main: Insel, 1980), pp. 211~245.

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³⁴⁾ 그에게 있어 헌법애국주의는 먼저 지난 30년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해온 자유로운 공화국 서독이 자기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개였다. 슈테른베르거는 독일 분단의 현실에서 독일인들에게 조국이란 곧 헌법(‘기본법’)이며 낡은 조국애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헌법애국주의를 제안했다. 그가 보기에 독일에서 민족감정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독일인들은 언제가 될지 모를 미래의 독일통일에 대한 막연한 희망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헌법 또는 완전한 헌법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일종의 조국이다.” 그는 18세기 말 까지 모든 형태의 애국주의는 법과 공동의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된 ‘헌법적 애국주의’였음을 역사적으로 환기시키며 아리스토텔레스나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 연구에 의거했다.³⁵⁾ 슈테른베르거가 생각했던 이 헌법애국주의는 단순히 헌법의 조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국은 “우리 모두를 이 나라의 시민으로 속하게 하고 우리가 매일 참여하며 계속해서 형성해가는 살아있는 헌법에서 채워지”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헌법애국주의는 단순히 성문헌법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정부, 의회, 야당, 관료, 노조 등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보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에 필요한 충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불만의 표출은 국가에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 슈테른베르거의 생각이었다. 대신 공화국의 시민은 국가와 헌법을 방어할

³⁴⁾ Dolf Sternberger, “Verfassungspatriotismus”(1979), in *Verfassungspatriotismus, Schriften X* (Frankfurt am Main, 1990), pp. 13~16 ; “Verfassungspatriotismus, Rede bei der 25-Jahr-Feier der ‘Akademie für Politische Bildung’”, *Schriften X*, pp. 17~31.

³⁵⁾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가 지닌 사상사적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Volker Kroneberg, *Patriotismus in Deutschland, Perspektiven für eine weltoffene Nation* (Wiesbaden: Vs Verlag, 2006), pp. 191~194 ; Jan-Werner Müller, *Another Country: German Intellectuals, Unification and National Ident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p. 93~94 ; Jörg Pannier, *Das Vexierbild des Politischen: Dolf Sternberger als politischer Aristoteliker* (Berlin: Akademie-Verlag, 1996)를 참조하라.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화주의적 헌법애국주의가 과연 민족적 애국주의의 대체물이냐는 것이다.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는 19세기 이후 확산된 국민국가에로의 충성 요구를 넘어선 논의임에 분명하다. 그것은 헌법 질서의 차별성과 소속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분단 독일에서 민족적 동질성과 일체감을 상대화 내지 주변화했다. 그의 글에는 공동의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이 지닌 역할을 찾아 볼 수 없기에 흔히 이해되는 바의 민족 지향적 애국주의와는 구분된다. 그렇지만 슈테른베르거는 동독 시민들과의 민족적 연대를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헌법애국주의가 독일의 민족 정서와 나란히 병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며 독일인들이 민족적 공속감과 통일 지향을 간직할 필요가 있음을 여전히 인정했다.³⁶⁾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폭정하에서는 애국주의가 존재할 수 없”음을 지적했기에 동독인들이 서독인들과 구분되는 동독 애국주의를 가지며 독자적 정체성을 발전시켜나갈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결국 슈테른베르거는 집단적 공동체로서의 충성과 결속을 헌법국가적 공화주의 영역에서 여전히 유지하고 강화하는 한편 ‘이(二)국가상태(Zweistaatlichkeit)’를 당연시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동서독 간 집단적 연대와 결속의 정치적 상상과 정체성의 논거를 제공하였다. 그렇기에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는 1990년 통일 이후 많은 보수-자유주의적 지식인들과 우파 정치가들에 의해 동서독을 통합할 민족적 애국주의로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36) Volker Kroneberg, *Patriotismus in Deutschland*, p. 195 ; Wolfgang Bergem, *Identitätsformationen in Deutschland* (Wiesbaden: Vs Verlag, 2005), p. 160 ; 원준호, “헌법애국심과 통일독일의 정체성 문제”,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3호 (2002년 10월), p. 200.

2. 위르겐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

이에 반해 비판적 철학자 하버마스는 1980년대 중후반 역사가논쟁 (Historikerstreit)의 와중에서 이 헌법애국주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탈민족적 독일의 자기의식”의 표현으로 간주했다.³⁷⁾ 하버마스는 서독이 서구정치문화를 수용하고 법국가적 질서를 확립하고 서방에 정치적으로 긴밀히 결합된 것을 전후 시대의 중요한 업적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슈테른베르거와는 달리 하버마스는 서독의 고유한 정치적 정체성의 문제에 매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애국주의가 국민국가적 틀에서 확증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하버마스가 보기에 헌법애국주의는 특수주의적 자기정체성으로서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인습적이고 탈-민족적인 정체성”을 채우는 내용이 되어야 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국민적 전통을 의문시하고 역사적 연속성을 극복하여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정치문화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에서는 슈테른베르거적 의미의 특정 국가나 헌법에 대한 충성 또는 민주적 국가의 방어를 넘어 다원주의적이고 다문화주의적인 시민적 자유와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의사소통의 확장과 민주적 절차의 정착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유,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보편주의적인 헌법 원리를 공유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 기반을 둔 탈민족적 정체성의 단초들은 단지 독일연방공화국을 넘어선 발전 속에서만 전개되고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버마스는 국민국가

37) 이하 내용은 다음 저술들에 기초했다. Jürgen Habermas, *Eine Art Schadenabwickl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7) ; *Die nachholende Revolutio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0), pp. 149~224 ; Rainer Nickel, “Verfassung und Verfassungspatriotismus”, in Hauke Brunkhorst and Regina Kreide and Cristina Lafont eds., *Habermas-Handbuch* (Stuttgart: Metzler, 2009), pp. 377~378 ; V. Kroneberg, *Patriotismus in Deutschland*, pp. 202~215.

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현실에서 탈민족적 헌법애국주의가 유럽통합 과정을 위해 유용한 개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하버마스에게 있어 이 보편주의적인 정치규범으로서의 헌법애국주의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가치나 정체성에 의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과 질서에 대한 복종과 같은 인습적인 정치윤리가 아니라 오히려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아우슈비츠! 정치문화와 역사의식에서의 파시즘의 극복은 특정한 역사적 관점을 형성하고 그것으로부터 탈민족적 정체성은 법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에 의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독의 특수한 정체성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을 초래한 민족사적 연속성의 완전한 단절과 극복으로 채워질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적 의사소통과 학습과정을 전제한다. 결국 하버마스의 탈민족적 헌법애국주의는 흔히 비판받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민족적 정체성도 부정하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세계 보편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국가공동체 성원의 집단적 자기의식과 민족사에 대한 자기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한 정체성”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었다.³⁸⁾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국가특수적인 비판적 민족의식의 모든 확정적 내용들이 “보편주의적 가치지향의 필터 속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한 국가와 사회는 자신의 민족사적 특수한 경험을 배경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 대결을 통한 정치문화 속에서 바로 보편적인 탈민족적 집단 정체성, 즉 헌법애국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1980년대 후반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를 둘러싸고 전개된 뒤이은

38) Jürgen Habermas, “Grenzen des Neohistorismus”, in *Die nachholende Revolution*, pp. 149~156, 특히 pp. 151~153. 하버마스는 “보편적 원칙들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의 **특정한**(강조: 하버마스)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bid., p. 152.

논쟁을 결산하기는 아직도 쉽지 않다.³⁹⁾ 한편으로 역사가 논쟁의 맥락에서 민족사의 단절과 자기 성찰적 정체성에 동의하는 많은 자유주의적 좌파 지식인들과 여론사회가 하버마스의 탈민족적 헌법애국주의를 지지하였다. 작가 귄터 그라스(Günter Grass), 사회학자 라이너 램시우스(M. Rainer Lepsius), 역사가 마틴 브로차트(Martin Broszat), 정치학자 존타이머(Kurt Sontheimer), 역사가 볼프강 몸젠(Wolfgang Mommsen)과 한스-울리히 벨러(Hans-Ulrich Wehler) 등 사민당 계열의 지식인들과 보수적 정치학자 칼 디트리히 브라허(Karl Dietrich Bracher)가 그들이다. 오랫동안 분단독일에서 이(二)-민족화 내지 탈민족화 과정을 관찰하며 그것의 현실적 함의를 성찰하던 그들에게 하버마스는 적절한 정치사상적 개념과 관점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 특히 주로 보수적 지식인들에게 이 개념은 감정이 결여된 “인위적 구성물”에 불과했다. 특히 동서독을 잇는 민족(국가)적 연대의식, 공속감, 역사적 정체성의 문제없이 애국주의를 논하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 또한 강했다. 보수적 정치학자 헤르만 뤼베(Hermann Lübe), 민족통일의 지지자 작가 마틴 발저(Martin Walser), 카톨릭 계열의 보수적 정치학자 한스-페터 슈바르츠(Hans-Peter Schwarz), 역사학자 하겐 술체(Hagen Schulze), 정치학자 칼-루돌프 코르테(Karl-Rudolf Korte) 등 보수적 지식인과 학자들 및 랄프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와 악셀 호네트(Axel Honneth) 등의 비판적 학자들 일부도 쉽사리 그 개념에 동의할 수 없었다.

결국 1989~1990년 예기치 않은 동독붕괴와 독일통일이 이 탈민족적 애국주의 개념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통일 후 하버마스로부터

³⁹⁾ 이 논쟁에 대해서는 Jan-Werner Müller, *Another Country*, pp. 97~98 ; W. Bergem, *Identitätsformationen*, pp. 164~167 ; V. Kroneberg, *Patriotismus in Deutschland*, pp. 211~215.

터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 또는 더 분명한 민족적 애국주의로 — 물론 민족주의와는 구분되고 보편주의적 내용을 담고— 다시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보수 지식인 및 우파 정치가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그럼에도 초민족적 유럽통합의 전망 속에서 하버마스의 탈민족적 헌법애국주의는 여전히 많은 비판적 지식인들의 중요한 지적 공유 지점이자 자극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 통일 이후 유럽통합의 정치적 과정이 의미있게 전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지체되고 굴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통일 독일에서는 이제 우파든 좌파든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내 조국도 사랑할’ 나름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IV. ‘예기치 않은’ 통일과 탈민족 정치

1. 1989년 가을 콜 정부의 독일정책

1980년대 서독에서 탈민족 논의는 비판적 지식인과 여론사회의 담론으로 끝나지 않았다. 1980년대에는 서독의 일부 정치 지배엘리트들도 — 비록 하나의 단일한 독일민족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재창출이나 급속한 독일통일에 지극히 회의적이었다. 1982년 헬무트 콜 수상 주도의 집권 기민련(CDU)/기사련(CSU)/자민당(FDP) 연정은 그 이전 1970년대 사민당/자민당 연정 시기의 동방정책과 그 정신을 철저히 계승하면서 “실용주의적 독일정책”의 기초를 이어갔다.⁴⁰⁾ 동독 체제가 자체 붕괴의 문턱으로 막 들어선 1989년 10월 말 이전 까지

⁴⁰⁾ 이에 대해서는 이동기, “보수주의자들의 ‘실용주의’적 통일정책—1980년대 서독 콜 정부의 동방정책 계승”, 『역사비평』 83 (2008년 여름), pp. 350~373.

서독의 보수-자유 연정은 아직 동서독 간 상호협력의 상호주의적 '연계(Junktim)'를 통해 동독 내정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고 공세적 통일강령을 통해 동독 체제를 흔들고자 하지도 않았다. 물론 콜 수상은 규범적이고 명목적인 차원에서 몇 차례 공식적 선언과 연설들을 통해 독일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실제 정책과 활동에서 그는 '이(二)국가주의자(Zweistaatler)'들과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콜 수상 또한 당시 전망이 보이지 않는 독일통일 보다는 유럽통합의 현실정치적 확장과 강화를 더 중요한 독일정치적 과제로 간주했다. 그렇기에 그는 당내 전통적 민족보수주의자들 및 하나의 단일한 민족적 정체성에 기초해 독일의 재-민족(주)화를 추구했던 뉴라이트 그룹들로부터 연신 비판받았다. 그렇지만 동독 체제의 붕괴가 현실로 들어난 1989년 11월 28일 콜 수장은 독일통일 '10개 조항 강령'을 제시하며 순식간에 모든 민족 재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쥐 수 있었다.

2. 사민당과 녹색당의 탈민족 대안들

반면 1980년대 내내 이(二)국가상태나 이(二)민족-테제에 의거해 국민국가로의 재통일을 포기하고 초민족적/탈민족적 해결책을 독일의 정치적 미래 구상으로 적극 선전한 정치가들은 두 좌파 야당에 몰려 있었다. 먼저 사민당의 지도적 정치가들은 독일에서 이국가상태가 장기 지속하는 것을 '정상적인' 현실로 받아들였다. 1980년대 야당으로서의 사민당이 내건 '제2기 동방정책'은 독일문제의 해결 보다는 유럽평화체제 구축과 유럽공동체 구상을 겨냥했다.⁴¹⁾ 1980년대 후반 사민당의 주요 정치가들 중 가장 민족 지향적이었던 브란트조차도 '재통일'이란 용어를 거부했

41) 이에 대해서는 Frank Fischer, "Im deutschen Interesse" *Die Ostpolitik der SPD von 1969 bis 1989* (Husum: Matthiesn Verlag, 2001), pp. 117~265을 참조하라.

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국민국가가 재탄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극히 회의적이었다.⁴²⁾ 그러나 민족의 현재와 미래, 다시 말해 하나의 단일한 독일민족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했다. 빌리 브란트처럼 여전히 하나의 단일한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공동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공속감에서 찾는 이들이 한 켠에 있었다. 그들은 동독주민들과의 민족적 결속과 연대를 여전히 강조하며 기본법의 통일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새로운 차기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던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으로 대표되는 사민당내 탈민족 지향의 정치가들에게 ‘독일민족’이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승인할 뿐 아니라 동독의 독자적 시민권을 인정할 것도 주장했다. 결국 1989~1990년 겨울 독일 통일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국면에서 사민당은 ‘통일되지 않은 채 통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⁴³⁾ 당시 사민당 당수이자 원내 총무였던 한스 요헨 포겔(Hans Jochen Vogel)과 브란트 등은 콜의 애초 통일구상, 즉 국가연합을 통한 연방국가로의 독일통일 및 통일독일의 나토(NATO)에로의 잔류 그리고 곧 1990년 1월 중순 그 구상의 변화, 다시 말해 국가연합 단계의 포기를 통한 급속한 통일 추진 등에 모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이에 반해 좀 더 젊거나 더 좌파적인 다수의 사민당 정치 지도자들, 특히 라퐁텐을 비롯한 “브란트의 손자들”은 시종 완강하게 탈

42) 1980년대 브란트의 양면적 독일통일관에 대해서는 Wolfgang Schmidt, “Was ‘Reunification’ the final objective of Willy Brandt’s Ostpolitik? Reflections on the discussion about the German question 1949~1990”, 『유럽통합과 독일의 분단, 통일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의 통일과제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2009년 5월 20일~23일), pp. 105~117.

43) Daniel Friedrich Sturm, *Uneinig in die Einheit. Die Sozialdemokratie und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1989/90* (Bonn: Dietz, 2006).

민족 전망의 해결책을 고수했다. 그들은 이미 현실적 정치일정으로 들어선 독일통일 자체를 거부하거나 최대한 유예시키면서 유럽통합을 통한 독일문제 해결 또는 이중적 국가연합을 통해 독일통일과 유럽통일의 동시적, 병행적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버마스과 그라스를 비롯한 상당수의 좌파 지식인들이 연이어 성명과 의견을 제출하며 국민국가로의 급속한 재통일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와 '재-민족(주의)화'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그 노선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들은 연이은 선거패배와 정치적 지지의 상실로 그 의미를 잃어갔다. 결국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의 제국의회 앞에서 새로운 "통일수상" 콜이 독일통일을 선언할 때 그 옆에서 있던 브란트는 통일의 또 다른 주역으로 빛을 발했지만 같은 자리에서 있던 라퐁텐은 어색한 미소를 지니며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민당과는 달리 녹색당(Die Grünen)은 처음에는 콜의 통일공세에 당황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전반기 평화운동에서 출발한 '민족좌파' 그룹들이 일찍이 정치적으로 배제, 소외된 뒤 녹색당은 탈민족 지향이 이미 정치적 함의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녹색당의 다양한 정파들은 동독에 대한 평가, 군사동맹 문제 그리고 통합유럽의 구체적 상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지만 독일문제가 이미 1945년 5월 8일 이후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특히 그들은 독일 분단을 나치 독재의 전쟁과 학살에 대한 '정당한 징벌'로 인지하였다.⁴⁴⁾

44) 녹색당 내 중심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던 '대서양주의자(Atlantiker)' 분파의 대표 정치가 요쉬카 피셔가 1987년 서베를린에서 행한 한 연설은 당시 녹색당 정치가들의 민족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독일 문제는 1945년 5월 8일 이후 더 이상 열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두 번의 전쟁, 칠천만 명이 넘는 사망자들, ……, 아우슈비츠와 여타 절멸수용소에서의 민족살해 그리고 1945년 5월 8일 4대 열강 군대의 독일제국의 완전한 궤멸로 이미 해결되었다." "Zwischen Wiedervereinigungssillusion und Nato-Austrittsfiktion."

게다가 그들은 독일과 유럽에서 평화 정착은 독일 분단을 국민국가적 방식으로 극복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국가상태에 기초해 이루어지는 블록 해체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1989년 겨울에도 녹색당의 탈민족 정치가들은 콜의 통일정책에 반대하며 동독의 개혁, 그것을 위한 서독 정부의 시급한 경제적 지원, 개혁된 동독의 정치적 주권 인정, 그리고 그것을 통한 유럽통합만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 과정임을 거듭 강조했다. 1990년 2월 초에 들어서야 요슈카 피셔(Joschka Fischer)를 비롯한 ‘현실주의자들(Realos)’과 안트예 풀머(Antje Vollmer) 중심의 ‘출발(Aufbruch)’ 그룹은 동독 주민들이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통일지향의 현실에 떠밀려 뒤늦게 교조적인 이(二)-국가론과 단절했다. 특히 ‘출발’ 그룹은 ‘생태 국가연합(Ökologische Konföderation)’안을 독일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동서독간 ‘민족 결합’(통일이 아니라!)을 수용하되 동독이 “서독의 시칠리”가 되지 않도록 “확장을 통한 부유함”이 아니라 “차이를 통한 부유함”의 원칙을 제기한 것이었다.⁴⁵⁾ 그들은 연방주의적 정치 원리를 환기시키며 독-독 간 결합과 유럽통합의 동시적 발전을 내세웠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애초 동독의 민주혁명을 주도했던 시민운동 세력 및 사통당(SED) 내 개혁공산주의자들 또한 같은 시기에 유사한 구상을 통해 흡수 통일에 반

Rede von Joschka Fischer zu den Grundsätzen einer neuen Deutschlandpolitik, gehalten am 20. November 1987 in der Urania Berlin”, Archiv Grüne Gedächtnis (이하 AGG) 1337, p. 5; “Protokoll der deutschlandpolitischen Debatte der Fraktion Die Grünen im Bundestag am 16. Juni 1984”, AGG, B. II, 1, Nr. 2715.

45) Grüner Aufbruch 1/90, “Ökologische Konföderation beider deutscher Staaten; Gemeinsamkeit in Autonomie”, AGG, Die Grünen im Bundestag 1983~1990, Bd. II, 1: Deutsche Einheit-Umweltpolitik-Sozialpolitik; Antje Vollmer, “Tips für David. Plädoyer für eine ökologische Konföderation”, in Frank Blohm and Wolfgang Herzberg eds., *Nichts wird mehr so sein, wie es war. Zur Zukunft der beiden deutschen Republiken* (Leipzig: Luchterhand Literaturverlag, 1990), pp. 117~125.

대하며 이중적 국가연합 구상에 의존해 동독의 자생적, 독자적 발전을 보장하고 주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⁴⁶⁾ 하지만 1990년 3월 18일 동독의 최초이자 최후의 자유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이 기본법 23조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지함으로써 동서독의 모든 탈민족 대안구상들은 역사의 에피소드로 전락하고 말았다.

3. 독일 통일과 탈민족주의자들의 한계

그런데 흔히 이해하듯 이 과정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붕괴로 사전에 모든 것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먼저 당시 탈민족 지향의 다양한 독일문제 해결책들이 정치적 의미를 잃은 것은 서독 콜 수상의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고 실용적이면서도 권력지향적이었던 통일정책의 추진 탓이다. 이미 콜은 한편으로는 11월 말 '10개조 통일 강령'에서 국가연합을 매개로한 단계적 방식의 국민국가적 통일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우파 민족보수주의자들과 신우파 및 극우파 그룹들의 지지를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통합의 장기적 전망("독일은 우리의 조국이고 유럽은 우리의 미래다")을 그 나뉠이로 제시하고 군사동맹 문제를 아예 통일논의에서 일시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탈민족 지향의 독일문제 해결 주창자들의 예봉을 꺾어 버렸다.

이에 반해 동독의 반체제 운동가들은 민족문제의 존재에 처음부터 관

⁴⁶⁾ Konstanze Borchert and Volker Steinke and Carola Wuttka eds., *Für unser Land Eine Aufrufaktion im letzten Jahr der DDR* (Frankfurt am Main: Iko Verlag, 1994) ; Wolfgang Harich, "Nochmals: Die Grünen der DDR zur deutschen Frage", in *Keine Schwierigkeiten mit der Wahrheit* (Berlin: Dietz, 1993), pp. 161~168 ; Gregor Gysi, "Wird es einen demokratischen Sozialismus in der DDR geben", in Frank Blohm and Wolfgang Herzberg eds., *Nichts wird mehr so sein, wie es war*, pp. 64~75.

심이 없었고 11월 중순 들어 ‘민주혁명’이 통일운동으로 전환되는 조짐에 소극적으로 응수했다. 또 서독의 탈민족 좌파들은 동독 주민들의 현실적 민족 지향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그것을 단지 서독의 풍요에 대한 물질적 욕구의 기형적 발현쯤으로 보았고 새로운 공격적 민족주의로의 전화 가능성이라는 허수아비를 밀치느라 바쁘기만 했다. 게다가 이 동서독 내 탈민족 지향의 좌파 정치가들은 독일 땅에서의 민족적 결속과 유럽대륙의 지역적 통합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잘 지적했지만 그 둘이 각각의 독자적 차원과 동력을 지닌 분리된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못했다. 탈민족 좌파들은 1980년대 내내 민족좌파들 및 신우파들이 독일통일과 유럽평화정착의 이중적 과정으로서 제시했던 국가연합안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또 그들은 —콜을 비롯한 체제 내 우파 정치가들과는 달리— 1989년 가을/겨울에도 동독 내 민주화 운동과 민족 전망의 역동적 관계에 대해 주목하지 못했다. 그들은 동서독 간 분단문제의 복잡성과 민족적 과제의 현실정치적 역동성과 함의를 방기한 채 미래에 걸려 있는 유럽통합이라는 신기루에 의지하다가 결국 기대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았던 통일”⁴⁷⁾ 국면을 빈손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뒤늦게 국가연합안에 매달렸지만 1990년 1월 중순 이후 국가연합은 이미 통일론이 아니라 반(反)통일론이 되었다. 결국 1989~1990년 전환기 그들의 탈민족 정치는 미래지향적 지평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반(反)민족적’, 반시대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47) Konrad H. Jarausch, *Die unverhoffte Einheit 1989~1990*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

V. 맺는말

전후 분단 독일에는 “좋은 의미의 독일적인 것은 탈독일적인 것”⁴⁸⁾이라는 니체의 이른 경구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먼저 주목할 것은 비판적 자유주의 지식인들과 좌파적 여론사회로 하여금 ‘독일적인 것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추동한 것은 애초부터 서방통합을 통한 서독의 정치경제적 성과와 정치문화의 서구화에 대한 자의식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아데나워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그 연방공화국 자의식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식의 이데올로기화한 체제정당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비극적이고 파과적인 전통적 민족사의 단절과 반성에 기초해 있었다는 점에서 서독의 탈민족론자들은 사실 아데나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서구 친화적 보편주의자들이었다. 이를테면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론에서 보듯 보편주의적 규범과 가치는 민족 또는 국가 특수적 경험에 대한 성찰적 정치문화와 비판적 자기정체성을 매개로 확보되는 것이었다. 물론 서독의 탈민족적 지향과 정체성이 처음부터 나치즘의 파국적 결과로 직접 주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독의 좌파적 탈민족론자들은 인위적이거나 가상적으로 세워둔 ‘공격적 민족주의’라는 허수아비와 맥락없이 싸운 것이 아니라 1970년대 후반부터 현실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과거사 변호론적인 ‘재-민족화’ 조류들과 대결을 벌이면서 비판적인 역사의식을 탈민족론의 근거로 채워나갔다.

아울러 이 탈민족론자들이 동독의 국가적 인정과 체제 존중을 누구보

48) 프리드리히 니체, 김미기 옮김, 『니체 전집 8,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I』, (서울: 책세상, 2002), p. 185 (인용문은 저자의 수정 번역임).

다 더 앞서 그리고 철저히 주장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상대의 인정을 통한 자기존재의 인정의 과정을 통해 서독의 탈민족론은 서독의 고유한 정치적 정체성의 존재를 확인해나갔다. 동서독 간 교류협력은 민족 간 유대를 만들어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질성을 확인하며 자기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양 체제 내에서 발휘되는 양상은 균질적이기도 균형적이기도 않았다. 서독 탈민족론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동독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동독정체성’이 아니라 ‘독일정체성’을 찾아나서고 있었다. 통일 전과 통일과정에서 서독 탈민족론자들이 겪은 비극의 핵심 원인은 민족정체성을 넘어선 그 동서독 개별 정체성 간의 비균질성과 불균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 한편 통일 후 동독주민들이 겪은 비극의 한 원천은, 서독 탈민족론자들이 잘 진단한대로 서독에서 이미 ‘독일정체성’이 아니라 ‘서독정체성’이 더 강했다는 사실이다.

탈민족론은 애초 하나의 단일한 집합적 정체성의 이데올로기적 부과나 강제적 지속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민족’이라는 신화를 넘어 현실로 존재하는 다양한 지향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탈민족론의 의의라면 그것은 스스로 ‘상상하’고자 하는 초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문제는 분단 일국적, 민족적, 초민족적 정체성들 중 하나의 규범적 우위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의 당위적 공존을 공허하게 강조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성급한 인위적 규범이나 지식 담론을 만들기 전에 한 정치공동체 내 다양한 주체들의 서로 다른 정체성들의 현실적 형성 과정 및 그 변화와 병존/마찰의 구체적 양상과 역동성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접수: 2009년 10월 26일 / 수정: 2009년 11월 17일 / 게재확정: 2009년 11월 22일

【참고문헌】

- 원준호. “헌법애국심과 통일독일의 정체성 문제”.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3호 (2002).
- 이동기. “보수주의자들의 ‘실용주의’적 통일정책—1980년대 서독 콜 정부의 동방정책 계승”. 『역사비평』, 83 (2008).
- . “서독 68운동과 독일정책: 민족좌파로서의 신좌파?”. 『독일연구, 역사, 사회, 문화』, vol. 17 (2009).
- Archiv Grüne Gedächtnis. 1337, BII 1-5146, B. II, 1-2715.
- . Die Grünen im Bundestag 1983-1990, Bd. II, 1: Deutsche Einheit-Umweltpolitik-Sozialpolitik.
- Ash, Timothy Garton. *In Europe's Name. Germany and the Divided Continent*. New York: Vintage, 1993.
- Bahr, Egon. “Gemeinsame Sicherheit. Gedenken zur Entschärfung der nuklearen Konfrontation in Europa”. *Europa-Archiv*, Folge 14 (1982).
- . *Was wird aus den Deutschen? Fragen und Antworten*. Reinbek: Rowohlt Verlag, 1982.
- Bender, Peter. *Das Ende des ideologischen Zeitalters. Die Europäisierung Europas*. Berlin: Severin und Siedler, 1981.
- Bergem, Wolfgang. *Identitätsformationen in Deutschland*. Wiesbaden: Vs Verlag, 2005.
- Blohm, Frank and Herzberg, Wolfgang (eds.). *Nichts wird mehr so sein, wie es war. Zur Zukunft der beiden deutschen Republiken*. Leipzig: Luchterhand Literaturverlag, 1990.
- Brandt, Peter and Ammon, Herbert (eds.). *Die Linke und die nationale Frage. Dokumente zur deutschen Einheit seit 1945*. Reinbek: Rowohlt Verlag, 1981.
- Diwald, Hellmut. *Geschichte der Deutschen*. Frankfurt am Main: Propyläen Verlag, 1978.
- Eichberg, Henning. *Nationale Identität, Entfremdung und nationale Frage in der Industriegesellschaft*. München: Herbig Verlag, 1978.
- Fischer, Frank. “Im deutschen Interesse” *Die Ostpolitik der SPD von 1969 bis 1989*.

- Husum: Matthies Verlag, 2001.
- Gaus, Günter. *Wo Deutschland liegt. Eine Ortsbestimmung*. Hamburg: Hoffmann u. Campe Verlag, 1983.
- Gallus, Alexander. *Die Neutralisten. Verfechter eines vereinten Deutschland zwischen Ost und West 1945-1990*. Düsseldorf: Droste, 2001.
- Habermas, Jürgen. *Eine Art Schadenabwickl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7.
- . *Die nachholende Revolutio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0.
- Hacker, Jens. *Deutsche Irrtümer. Schönfärber und Helfershelfer der SED-Diktatur im Westen*. Berlin: Ullstein, 1992.
- Harich, Wolfgang. *Keine Schwierigkeiten mit der Wahrheit*. Berlin: Dietz, 1993.
- Heß, Jürgen C. "Die Bundesrepublik auf dem Weg zur Nation". *Neue Politische Literatur*, 3/Jg. 26 (1981).
- Jaraus, Konrad H. *Die unverhoffte Einheit 1989-1990*.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
- Jaspers, Karl.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Über Aufgaben deutscher Politik*. München: Piper, 1960.
- Jesse, Eckhard (ed.). *Renaissance der deutschen Frage*. Stuttgart: Klett-Cotta, 1987.
- Kocka, Jürgen. "Nation und Gesellschaft. Historische Überlegungen zur deutschen Fragen". *Politik und Kultur*, 1 (1981).
- Klönne, Arno. *Zurück zur Nation? Kontroversen zu deutschen Fragen*. Köln: Diederichs Eugen, 1984.
- Kroneberg, Volker. *Patriotismus in Deutschland. Perspektiven für eine weltoffene Nation*. Wiesbaden: Vs Verlag, 2006.
- Mann, Golo. *Deutsche Geschichte des 19. und 20. Jahrhunderts*. Frankfurt am Main: Fischer Verlag, 1966.
- Mommsen, Hans. "Auf der Suche nach der Nation.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Nationalbewusstseins". *Evangelische Kommentare*, Nr. 10/Jg. 12 (Oktober 1979).
- . "Nationalismus und transnationale Integrationsprozesse in der Gegenwar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9 (1980).
- Müller, Jan-Werner. *Another Country: German Intellectuals, Unification and National Ident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Niethammer, Lutz. "Bundesrepublik und Nation". *Politik und Kultur*, 4 (1977).

- . “Traditionen und Perspektiven der Nationalstaatlichkeit für die BRD(1971)”, in *Deutschland danach, Postfaschistische Gesellschaft und nationales Gedächtnis*, Bonn: Dietz, 1999.
- Pannier, Jörg. *Das Vexierbild des Politischen: Dolf Sterberger als politischer Aristoteliker*, Berlin: Akademie-Verlag, 1996.
- Plessner, Helmut. *Die verspätete Nation*, Stuttgart: Kohlhammer, 1959.
- Roth, Florian. *Die Idee der Nation im politischen Diskurs. Die Bundesrepublik zwischen neuer Ostpolitik und Wiedervereinigung (1969~1990)*, Baden-Baden: Nomos, 1995.
- Sander, Hans-Dietrich. *Der nationale Imperative. Ideengänge und Werkstücke zur Wiederherstellung Deutschlands*, Krefeld: Sinus Verlag, 1980.
- Schmidt, Wolfgang. “Was ‘Reunification’ the final objective of Willy Brandt’s Ostpolitik? Reflections on the discussion about the German question 1949~1990”, 『유럽 통합과 독일의 분단, 통일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의 통일과제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2009년 5월 20일~23일).
- Schweigler, Gerhard. *Nationalbewusstsein in der BRD und DDR*,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3.
- Sontheimer, Kurt. “Nation und Nationalismus in der Bundesrepublik” (1969), in Hans Steffen (ed.), *Gesellschaft in der Bundesrepublik*, 2. Tei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1.
- . *Deutschland zwischen Demokratie und Antidemokratie. Studien zum politischen Bewußtsein der Deutschen*, München: Nymphenburger Verlagshandlung, 1971.
- . “Reden über Deutschland”, in: *Reden über das eigene Land; Deutschland 6*, München, 1989.
- Sterberger, Dolf. *Ich wünschte ein Bürger zu sein’ Neun Versuche über den Staa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67.
- . *Staatsfreundschaft, Schriften IV*, Frankfurt am Main: Insel, 1980.
- . *Verfassungspatriotismus, Schriften X*, Frankfurt am Main: Insel, 1990.
- Sturm, Daniel Friedrich. *Uneinig in die Einheit. Die Sozialdemokratie und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1989/90*, Bonn: Dietz, 2006.
- Thiemeyer, Guido. “Supranationalität als Novum in der Geschichte der internationalen

- Politik der fünfziger Jahre".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History*, vol. 4 (1998).
- Venohr, Wolfgang (ed.). *Die deutsche Einheit kommt bestimmt*. Bergisch-Gladbach: Luebbe Verlagsgruppe, 1982.
- Vogtmeier, Andreas. *Egon Bahr und die deutsche Frage. Zur Entwicklung der sozialdemokratischen Ost-und Deutschlandpolitik vom Kriegsende bis zur Vereinigung*. Bonn: Dietz, 1996.
- Westle, Bettina. *Kollektive Identität im vereinten Deutschland. Nation und Demokratie der Deutschen*. Opladen: Leske + Budrich, 1999.
- Winkler, Heinrich A. and Kaelble, Hartmut (eds.). *Nationalismus - Nationalitäten - Supranationalität*. Stuttgart: Klett-Cotta, 1993.

Abstract

The Postnational Discourse and Politics in the Divided Germany
and its Reunification Process

Lee, Dong-ki(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SNU)

The West German postnationalism had developed itself on its initial stage, not so much of coming to terms with the national past of the Nazism but as effect of the Adenauer's policy of Western integration. The self-consciousness of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s in FGR was based on a new postnational identity among not a few liberal or left intellectuals in West Germany. Coped with the nationalistic political forces that strived for a 're-nationalization' of the divided Germany the postnational exponents confirmed the tendency of the West Germans to a separated national identity and stood up against a compelled German national consciousness as a whole. The universalistic norm and value which the postnational intellectuals advocated could be confirmed only by breaking off with the negative national history and tradition, as the Habermas' constitutional patriotism could be seen. They had nothing so in common with a ideological system legitimation, as with the achieved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through the self-reflexive confrontation with the Holocaust.

The West German advocates for the bi-nationalization thesis we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y had argued most ardently for the recognition of the East German State as a second German state and for the respect for its system. In recognition of the other they could find their own

specifics out and develop a self-identity. It should be remarked that the German-German contacts and cooperation through the Ostpolitik had also brought forth a sense of distance and difference towards the national partner and strengthened the separated self-identity, at least in West-Germany. But they had been not able to consider of the disequilibrium and inhomogeneity of the separate developed national consciousness in two German states. In addition, in the critical phase of German reunification 1989/1990 the postnational exponents had a disregard of the dynamic relationship of the democratic revolution and the coming national desire in East Germany and could not make a proper counterproposal to the existing national expectation of the East Germans.

Keywords: postnationalism, bi-nationalization thesis, constitutional patriotism, Ostpolitik, Western integration, German reunification

이동기

독일 예나대학교에서 '1949~1990년 분단 독일의 국가연합 통일안'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 서양사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보수주의자들의 '실용주의'적 통일정책—1980년대 서독 콜 정부의 동방정책 계승』, 『경제인의 시간들: 분단 독일 초기(1949~1956) 국가연합 통일안의 등장』, 『1950년대 후반 동독 사통당의 국가연합 통일안』 등이 있다.